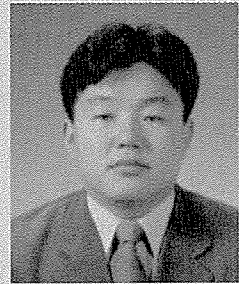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급식법 개정과 우유급식 사업의 현황 및 과제



탁 명 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들어가며

최근 국내 최대의 급식업체에서 공급하는 급식으로 인해 식중독 3천여명, 급식중단 10만여명에 이르는 최악의 학교급식 사고가 발생하였다. 초중고 학교에서 질 낮은 급식과 식중독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번 학교급식법 개정문제가 촉발되게 되었고 미흡하지만 국회에서 직영전환을 의무화하는 등 진일보한 소폭의 법개정이 이뤄진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001년부터 시작된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에서 지자체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으로 이어진 학교급식운동은 수많은 조례를 만들어내는 성과가 있었다. 이 조례제정 또한 전북조례를 대법원에서 우리농산물 사용 조항이 가트협정에 위배된다며 무효화시켰고, 경기·경남·충북 등 광역조례들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학교급식법 개정 등 급식운동의 흐름과 현황, 더불어 우유급식사업의 현황까지 살펴보고 향후 학교급식운동의 방향을 짚어보기로 한다.

학교급식운동의 흐름

연도	활동 내용
2001	미국 학교급식 자국산 농산물 의무화 언론소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시작 한농연, 농단협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지역산 농산물 사용 전라북도 조례시안 최초 발표 학교급식법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결성 준비
2002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창립기념 공청회 개최 연대회의 급식법개정 청원
2003	전국 최초 주민발의 청구 전라남도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조례 제정 전국 최초 기초자치단체 나주시 조례 제정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
2004	국민운동본부 학교급식법안 마련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 조례 제정
2005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시민걷기대회 개최 전북조례 무효 대법원 판결 국민운동본부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안법안 제출
2006	외교통상부 WTO 협상(조달협정) 양허안 제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학교직영, 광역 급식센터 설치 근거 등)

위에 정리한 것처럼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은 우리농산물 사용을 핵심으로 농민단체에서 법개정 운동을 하게 되었다. 2001년만 해도 학교급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고 미국의 학교급식

현황이 막 소개되던 시기여서 법개정을 목표로 우리농산물 사용을 위한 활동이었기에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벌이고 미약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소개해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해본다. 이후 운동의 방향은 농업에서 교육으로, 농산물 공급처 확대에서 수요자의 운동으로, 중앙의 법개정 운동에서 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에 기반한 조례제정 운동으로 확산되어갔다. 이런 지속적인 학교급식운동의 작은 결실이 이번 식중독사고로 인해 학교직영과 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만드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학교급식의 3대원칙

-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 직영, 무상 확대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는 우리농산물 사용과 학교 직영, 무상 확대를 3대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3대원칙을 갖고 법과 조례제정 운동을 벌여가고 있다. 이 세가지 원칙이 각기 별개의 사안은 아니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유보한다면 급식운동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왜 3대 원칙을 고수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1) 우리농산물 사용 원칙

학교급식운동에서 최고의 목표는 우리농산물 사용에 있을 것이다. 우리농산물 사용 문제가 지금까지 풀지 못한 숙제가 되고 있고 이번 급식법 개정에서도 역시 언급되지 않았다. 우리농산물 사용은 단순한 판로확대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 학교급식도 교육의 한부분이고 우리의 식습관을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이다. 학교급식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이 식중독과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유통

과정과 조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렴한 수입농산물의 사용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런 잦은 식중독과 먹기를 꺼려하는 식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자라면서 우리 먹거리문화에 혐오감을 갖게 될 수 있고 이는 학교 내외의 junk food, fast food를 키우고 이 유희에서 학생들은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운동본부에서는 우리농산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강조하고 있다. 얼핏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명분이 없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우리농산물 공급은 자칫 수입농산물보다 비싼 국내산 농산물의 판매에만 목적을 두는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생산자인 농민들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함께 실천해가야 하는 과제라고 보여진다.

2) 학교 직영의 원칙

앞서 설명한대로 학교급식도 교육의 한 부분이다. 이런 교육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은 부득이 하게 이윤을 내기 위한 유희가 있을 것이다.

※ 학부모부담 학교급식비 사용 내역

(서울시교육청 2003년9월)

구분	평균급식비/1식	식재료비(%)	운영경비(%)	이윤(%)
직영 (초등)	1,540원	1,459원 (94.7%)	81원 (5.3%)	0원
위탁 (중고)	2,140원	1,193원 (55.7%)	825원 (38.6%)	122원 (5.7%)

급식은 시설비와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빼면 식재료의 사용에서 이윤의 폭이 결정되어 있다. 이런 식재료를 통한 이윤창출 구조가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고, 실제 학교직영

보다 14배가 높은 식중독 사고율(2003년 12월 교육부)을 보면 보다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또한, 위탁급식으로 인한 학교내에서의 부정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중앙정부의 급식프로그램이 학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려면 외부업자가 아닌 학교에서 직접운영해야 가능해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

3) 무상급식 확대 원칙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을 헌법상에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역시 학교내에서의 급식도 이에 준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비의 대부분을 수혜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여건 속에서는 교육이 표방하는 평등과 복지가 실현될 리 만무하다. 학교급식은 국가가 학교에 급식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WTO 위반이라는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고 그 비용 또한 정부에서 지출되며,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 직영, 무상 확대는 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통합된 개념이 된다.

학교 우유급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학교 우유급식 사업 현황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체력증진과 함께 우유 소비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을 배경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유급식비를 보조해주고 소비기반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보장 대상의 학생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약 3백5십만명이 이 사업을 통해 우유급식을 지원받고 있다.

물론,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학교급식법 개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우유급식확대는 전반적인 급식의 질 향상과 우리농산물 사용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본다. 이 우유급식사업이 정부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일선학교와의 협조로 저소득층에게 공급된다는 점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인한 우리농산물 공급시스템을 그려보게 된다.

○ 우유소비의 확대가 절실하다

과잉공급되는 원유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폐업보상금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원유생산량의 14%인 33만t이 지난해 잉여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국내 잉여량 속에서도 유제품 수입은 늘고 있어 우유소비를 확대시킬 방안마련이 절실하다. 올해 시유소비 전망은 약 172만t으로 05년보다 1% 정도 소폭 늘어나고, 잉여율도 21.6%로 역시 작년 23.7%보다 낮지만, 원유생산량은 05년보다 1.6% 줄어든 219만 4,5백t 정도로 전망되

학교급식 사업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명/일, 백만원)

구분	'92-'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예산안)	2007년	
사업량	2,295	210	279	352	352	
사업비	계	98,767	14,733	20,507	23,760	23,760
	보조	98,767	14,733	15,380	16,632	16,632
	지방비	-	-	5,127	7,128	7,128

고 있어 아직도 높은 잉여율을 보이고 있다.

○ 학교 우유급식 확대 방안

현재 학교우유급식은 방학기간 동안 어떻게 우유 소비를 유지하는가에 문제점이 있다. 방학 중 우유 급식 중단에 따른 재고부담이 있어 우유급식 확대를 가로막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뚜렷한 대안이 없어 전체적인 우유급식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우유급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학생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이 선정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도 공급이 가능하다. 고정적인 학교우유급식 소비층과 단체장이 선정할 수 있는 유동적인 소비층이 있고 이 예산도 지자체의 몫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학교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적극 홍보해서 우유급식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북도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일반학생들에게도 우유가격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 내 우유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의 협조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이다.

수입농산물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미국은 자국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에서 WTO 정부조달협정에 학교급식을 포괄적 예외로 하고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 일본도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정부차원의 학교급식 식재료물 지원하는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논의를 떠나서 보더라도 초중고 학생들이 하루 한끼를 먹는 급식에 너무 안심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농무성의 '식품영양서비스(FNS) 프로그램'을 보면, 2005년도에 2570만명의 저소득층에게 식품배급권(food stamp)을 지급

했고, 이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8조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 미국 농무성 예산의 50% 넘는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이런 제도들이 자국산 농산물 소비확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자명한 일이다.

맺으며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우리농산물 판로확대와 수입농산물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소비의 증가는 당연히 가격저지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는 다시 열악한 농가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 낙농산업의 경우도 우유급식의 확대와 함께 우리 백색시유의 학교급식이 우선된다면 계속되고 있는 수입 유제품을 막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 직영, 무상 확대의 원칙이 적용되는 학교급식법 개정은 우리 농산물 판로확대와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농상생, 양극화해소 등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WTO를 핑계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우유급식의 예에서 보듯이 이 사업을 위해 들어가는 중앙정부 재정이 15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사업이다. 이런 급식을 모든 농산물에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품목별로 점차적으로 확대해간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본다. 이제 직영 전환을 쟁취했고 WTO 조달협정에 학교급식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도록 외교통상부에서 제출해놓은 상황이다. 7년째를 맞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이 올해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농업계에서부터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